

대한민국 법원은 공정한가?: 민사소송 항소율의 분석*

김 두 열**

논문초록

본 연구는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판결의 공정성 수준을 높이려는 항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소를 억제하는 기존 방안들보다는 변호사 공급규제 철폐나 1심 판결 강화에 필요한 판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법원별 판사당 업무부담과 항소율 간의 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핵심 주제어: 판결의 공정성, 항소율, 판사의 업무부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K41

투고 일자: 2011. 1. 5.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1. 26. 게재 확정 일자: 2011. 3. 22.

* 본 연구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I): 민사판결에 대한 동의 수준의 제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0-10, 한국개발연구원(2010)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초고는 KDI, 고려대학교 및 경북대학교 세미나, 그리고 법사회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 작업을 수행해준 김지은, 임효정 연구원, 그리고 박소윤씨께 감사한다. 아울러 논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 두 분, 김동석, 김정옥, 김정호, 오형나, 이호준 박사, 권경현 변호사, 김도현 교수, 그리고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mail: duolkim@kdi.re.kr

I. 서론

국민의 재산권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사법, 경찰, 국방서비스의 제공은 국가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Raison d'Etat*)이다. 이 가운데 사법서비스는 물리력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 즉 재산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업무를 시장이 아닌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 제공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서비스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권의 확정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손쉽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이므로, 시장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한 사법서비스는 국가의 정당성(*legitimacy*)이 창출되는 근거일 뿐 아니라 시장에 근거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므로,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은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화해서 본다면, 그 동안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법원의 정치적 독립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들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고되었지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법관의 도덕성이다. 법관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 판사들의 수임사건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전관예우”, 판사들의 승진제도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인해 판결이 왜곡된다는 지적 등은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¹⁾

이상과 같은 비판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나 판사의 도덕성 제

1) 이러한 문제 제기 중 최근의 것으로는 김두식(2009), 김용철(2010), 이국운(2009), 이용훈(2008), 임종인·장화식(2008) 등이 있다.

고를 촉구하는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160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비판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만한 경우는 전체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²⁾ 둘째로 정치적으로부터도 독립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판사들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들이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사법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려면 판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을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충분히 공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민사소송 1심판결의 항소율 분석을 통해 구해 보기로 한다. 항소 제기는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소송과 같은 영합게임(zero-sum game) 상황에서 이해가 상치되는 소송당사자 모두의 동의는 판결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한 판결은 판결에 대한 동의를 함축하며, 항소율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보다도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이 항소율을 통해 공정성의 수준과 제고 방안을 분석하는 이유이다.

항소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³⁾ 하지만 법학계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항소가 지나치게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항소를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분쟁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론에 기반해서 항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항소율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법학계의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한편 사법관련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항소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법원의 항소율이 낮아 기인한다고 짐작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항소에 대한

2) 2008년 법원에 접수된 1심본안소송사건은 총1,601,807건이다. 『2009 사법연감』, p. 488.

3) 콕테일 외(2006), 김용진(1998, 2009), 방순원(1960), 정선주(2009), 유혜용(2008) 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부합하는 분야를 새로이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⁴⁾

이하에서는 먼저 판결의 공정성과 항소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뒤(제Ⅱ장), 항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제Ⅲ장).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율 수준이 얼마인지, 이것이 외국에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제Ⅳ장). 항소율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도 개선과 판사업무부담 감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제Ⅴ, Ⅵ장).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를 글 말미에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제Ⅶ장).

Ⅱ. 판결의 공정성과 항소: 개념 정의

1. 공정성

판결의 공정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판사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이것은 판사라는 직책에 요구되는 의무사항 혹은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아무런 외적 간섭이나 사심 없이 소송당사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는 자세이다.

둘째는 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B가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 상황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A가 소송가액 X원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사는 X의 일정비율, 즉 α ($0 \leq \alpha \leq 1$)를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선고할 것이다. 앞서 정의한 불편부당한 판사가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완벽한 법률해석 하에 내리는 판결을 α^* 라 한

4) 미국의 항소율에 대해서는 제Ⅳ장 제2절 참조. 한편 Kessler and Rubinfeld(2007)는 항소에 대한 미국학계의 실증 연구를 개괄하고 있다.

다면, 완벽한 의미의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판사가 α^* 를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불편부당성을 견지할 경우, 그가 내리는 판결은 정확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불편부당성은 정확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판결이 공정한 지 여부는 판사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보다는 판사의 행위 혹은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판사의 공정성”이 아닌 “판결의 공정성”으로, 따라서 판사의 불편부당성이 아닌 판결의 정확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의 정확성이란 정의에 입각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항소

판사가 α^* 를 선고한다면, 소송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다른 α 가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를 함축한다. 반대로 판결이 α^* 와 다르다면 재판과 같은 영합게임(zero-sum game)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항소란 정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이의를 드러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이상의 정의는 소송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혹은 항소 여부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판결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도 판결의 공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현실의 판사들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적 의미의 정확성, 즉 α^* 를 파악해서 판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사가 내리는 실제 판결 α 는 α^* 와 차이를 내포한다. 이 오차를 ϵ 라 정의한다면 이들 간에는

$$\alpha \equiv \alpha^* + \epsilon \quad (1)$$

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오차의 존재는 소송당사자 중 한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psilon \neq 0$ 인 모든 판결, 나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소송당사자들 역시 절대적으로 정확한 α^* 나 ϵ 를 알 수는 없으며, 설사 이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항소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모든 $\epsilon \neq 0$ 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소송당사자들이 오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얼마만큼의 오차를 허용해서 판결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 허용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현실의 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항소 제기에 대한 모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Ⅲ. 항소결정모형

1. 소송당사자들의 항소결정

소송당사자들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간단한 소송진행 관련모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물품대금지급 문제에 의거해 본다면, A는 B의 대금지급 거절에 대해 과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받아낼지 결정을 하게 된다. A가 과실을 인정할 때의 수입을 0, 이에 대해 물품대금 및 여러 가지 피해액을 반영해서 법원에 제시한 소송가액을 X원이라고 하자.⁵⁾ 법원의 판결은 B가 A에게 X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1심에서 결정된 지급비율이 α_1 ($0 \leq \alpha_1 \leq 1$)이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은 $\alpha_1 X$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된다. 1심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양당사자에게 C_1 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1심 결과에 따른 A와 B의 수입은 각각 $\alpha_1 X - C_1$ 와 $(1 - \alpha_1)X - C_1$ 가 된다.

만일 양자가 이 결과에 동의한다면 소송은 여기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A와 B 중 어느 한편이라도 소송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제기하게 된다. 항소심

5) 소송을 포기할 때의 수입을 0이라고 설정한 것은 분석의 편의상 정규화(normalization)한 결과이다. 이 값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설정하더라도 이후 논의의 핵심에는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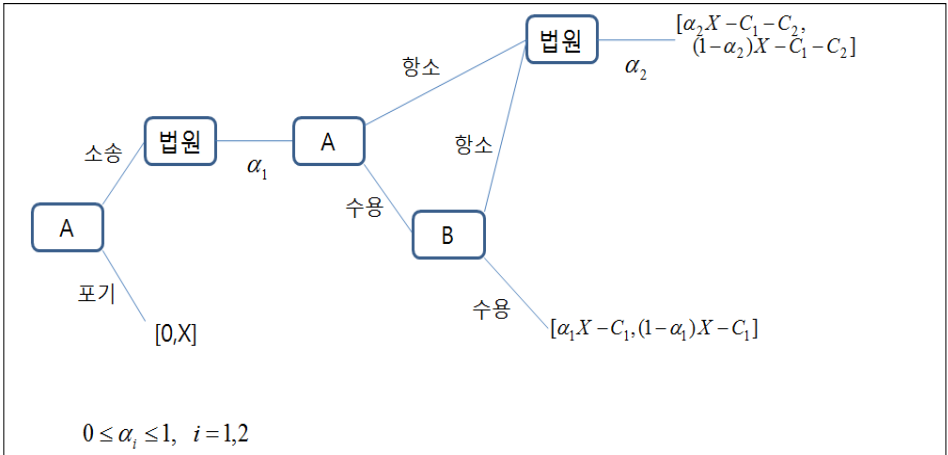
의 판결이 α_2 ($0 \leq \alpha_2 \leq 1$) 이고 항소에 따른 비용이 양자에게 C_2 로 동일하다면, A와 B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수입은 $\alpha_2 X - C_1 - C_2$ 와 $(1 - \alpha_2)X - C_1 - C_2$ 가 된다. 편의상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할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A가 항소 대신 1심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항소를 통한 추가적 이익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을, 즉 $\alpha_1 X - C_1 \geq E(\alpha_2)X - C_1 - C_2$ 를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B 역시 $(1 - \alpha_1)X - C_1 \geq (1 - E(\alpha_2))X - C_1 - C_2$ 이면 1심결과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α_1 이

$$E(\alpha_2) - \frac{C_2}{X} \leq \alpha_1 \leq E(\alpha_2) + \frac{C_2}{X} \quad (2)$$

일 경우, 분쟁은 1심으로 종결된다.

〈그림 1〉 항소결정모형



이상적으로 잘 정의된 법령 하에서 판사가 충분한 숙고를 통해 내리는 최선의 판결, 즉 공정한 판결을 α^* 라고 하자. 그리고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을 θ ($0 \leq \theta \leq 1$)라 하고, 원심판결을 고수할 확률을 $(1 - \theta)$ 라고 하자.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이 항소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E(\alpha_2) = \theta\alpha^* + (1 - \theta)\alpha_1$ 일 것이다. 1심의 결과와 $E(\alpha_2)$ 간의 차이를 δ 로 정의한다면, δ 는

$$\begin{aligned}\delta &\equiv |\alpha_1 - E(\alpha_2)| = |\alpha_1 - (\theta\alpha^* + (1-\theta)\alpha_1)| \\ &= \theta|\alpha_1 - \alpha^*|\end{aligned}$$

가 된다. 그 결과 식 (2)는

$$\delta \leq \frac{C_2}{X} \tag{3}$$

가 될 것이다. 반대로 소송당사자 중 한편이 항소를 하게 될 조건은

$$\delta > \frac{C_2}{X} \tag{4}$$

이다.

식 (3) 과 (4)는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이며, 이 변수들이 항소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 내용을 열거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C_2 = 0$ 이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1심 판결이 “완벽하게 정확한” 경우에만, 즉 판사가 $\alpha_1 = \alpha^*$ 를 선고해서 $\delta = 0$ 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종국이 이루어진다.

둘째, 현실에서 $\delta = 0$ 가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송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인 C_2 가 0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소송을 수행하는데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게 된다. 한편 식 (3), (4)의 $\frac{C_2}{X}$ 는 식(1)의 오차 항인 ϵ 에 상응하며, 현실에서 $\epsilon \neq 0$ 인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C_2 \neq 0$ 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어진 $\frac{C_2}{X}$ 하에서는 δ 가 클수록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사건에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는 δ 를 줄이는, 궁극적으로는 항소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변수를 논의하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넷째, θ 가 클수록, 즉 판결의 오류가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수록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섯째,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항소가능성이 증가한다. 소송가액이 증가하면 법원 판결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의 규모가 비용에 비해 훨씬 크게 되므로 항소의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소송에 드는 비용이 커질수록 항소는 감소한다.⁶⁾ 판사의 판결이 다소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작다면 소송당사자들은 판결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한다면, 사건 i 의 분쟁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지 여부는

$$y_i = f(\delta_i, C_i, X_i) \quad (5)$$

$$y_i = 0 \quad \text{종국}$$

$$y_i = 1 \quad \text{항소}$$

와 같은 함수로 정의해 볼 수 있다. δ 와 X 가 클수록, C 가 작을수록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위 변수들 중 소송가액 X 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δ 와 C 의 크기는 판사의 행위 혹은 법원의 정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C 와 관련된 내용은 실증분석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δ 가 법원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판사의 업무부담과 항소율

δ_i 의 크기는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 이것은 사건에

6)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제1심에 들인 비용은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매몰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투여하는 판사의 노력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판사 j 가 사건 i 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e_i 라고 정의하고, e_i 는 사건을 위해 사용한 시간에 비례한다고 하자. 이럴 경우 판사가 1심에서 내리는 판결인 α_{1i} 이 얼마만큼 α_i^* 에 근접하는지, 혹은 δ_i 가 얼마나 작은지 여부는 해당사건에 들이는 노력수준에 달려 있다. 즉

$$\delta_i = \delta(e_i) \quad (5)$$

이며, 이 함수는 $\frac{d\delta}{de} < 0$, $\frac{d^2\delta}{de^2} > 0$ 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식 (5)를 식 (4)와 결합하면, 사건 i 의 항소결정함수는

$$y_i = f(\delta(e_i), X_i, C_i) \equiv g(e_i, X_i, C_i) \quad (6)$$

$$\frac{dg}{de} < 0, \frac{d^2g}{de^2} > 0$$

가 된다.

자신의 책무에 충실한 판사 j 가 이 사건만 판결해도 된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판결이 α_i^* 에 근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 j 는 여러 사건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편의상 판사 j 는 자신이 판결한 사건 전체의 평균항소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상정해 보자.⁷⁾ t 년 동안 처리한 사건 가운데 항소가 이루어진 사건수의 비율을 항소율이라고 정의한다면, 항소율은

7) 원칙적으로 본다면 판사들이 여가(leisure)와 노동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들의 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어진 업무시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상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판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인으로는 승진이 중요하데, 종국률은 명시적으로 혹은 평판 등의 암묵적 방식으로 승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항소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상정 자체는 현실과 크게 괴리된 설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r_{jt} \equiv \frac{A_{jt}}{T_{jt}} \quad (7)$$

T_{jt} : t 년도 판사 j 가 처리한 총사건수

A_{jt} : t 년도 판사 j 가 처리한 사건들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수

$$(A_{jt} = \sum_{i=1}^T y_{ijt})$$

로 정의할 수 있다.⁸⁾ 판사가 t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의 총량 혹은 총가용시간을 1로 정규화한다면, 판사 j 가 개별사건 i 에 투여할 노력수준 e_{ijt}^* 는

$$\begin{aligned} \min ar_{jt} \\ \text{s. t. } 1 \geq \sum_{i=1}^s e_{ijt} \end{aligned}$$

을 만족시키는 값이 될 것이다.

e_{ijt}^* 는 사건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단, 사건간 e_{ijt}^* 의 편차가 아닌 e_{ijt}^* 의 평균수준은 사건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할 것인데, 이는 예산제약으로부터 직접 유도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e_{ijt}^* 의 평균수준 감소는 평균항소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판사 j 가 t 년도에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항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ar_{jt}^* = ar_{jt}(T_{jt}, C_{jt}, X_{jt}) \quad (9)$$

$$\frac{\partial ar}{\partial T} > 0, \frac{\partial ar}{\partial X} > 0, \frac{\partial ar}{\partial C} < 0$$

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판사 j 를 단위 법원으로 해석한다면, 식 (9)는 법원당 평균 항소율 결정함수로 볼 수 있으며, 각 변수는 각각 판사당 사건수, 소송에

8) 현재 법원에서는 종국율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종국율은 사실상 1-항소율에 해당한다.

소요되는 평균비용, 그리고 사건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

1. 항소율

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28만건의 민사소송 1심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41,000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다(〈표 1〉). 재판부별로는 합의, 단독, 소액 사건의 항소율이 각각 25.2%, 6.6%, 1.1%인데, 이 점은 항소율과 소송가액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제Ⅲ장 제1절의 추론과 일관된 것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민사소송사건 전체의 항소율 수준이 소액심판사건의 항소율에 근접한 3.2%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체 민사소송 가운데 소액심판사건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심판사건은 채권 존재 여부 확인처럼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낮은 소송가액과 함께 항소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액심판사건을 포함한 전체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율을 분석할 경우, 항소율 결정 요인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⁹⁾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액심판사건을 제외한 “단독 이상” 사건을 기본 단위로 해서 분석을 수행하되, 여기에 합의심 사건은 분리해서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사건의 경우, 2008년에 31,000건 가량의 항소가 발생하였으며, 항소율은 9.4%이다. 물론 특정 연도의 항소율 수준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선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율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합의심과 단독심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 1980년 이후 단독심의 기준을 50만 원으로부터 2천만 원으로, 합의심의 기준도 2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다(〈표 2〉). 이러한 기준 조정은 법원의 사건부담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¹⁰⁾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항소가능성이 높다는 앞서의 추론에 의거해 볼 때, 기준액 조정을 통해

9) 소액심판사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두열(2007 a, b) 참조.

10) 김두열(2007), pp. 25-31.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을 합의심에서 단독심, 단독심에서 소액심판으로 이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항소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소율의 장기추세는 상방편의 (upward bias) 를 내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추세를 해석하거나, 혹은 2001년 이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1〉 민사본안 1심사건 항소율, 2008년 (건, %)

	처리사건 (A)	판결사건 (B)	항소사건 (C)	항소율 (C/A)	판결사건항소율 (B/A)	판결사건비율 (B/A)
합의	48,880	29,794	12,305	25.2	41.3	61.0
단독	283,011	199,981	18,786	6.6	9.4	70.7
소액	952,539	620,859	10,160	1.1	1.6	65.2
합계						
단독 이상	331,891	229,775	31,091	9.4	13.5	69.2
1심 전체	1,284,430	850,634	41,251	3.2	4.8	66.2

주: “단독 이상”은 단독심과 합의심을 합한 것을 지칭한다.

자료: 『2009 사법연감』(2009), pp. 664-671.

〈표 2〉 민사본안1심사건 중 합의심과 단독심의 소송가액 하한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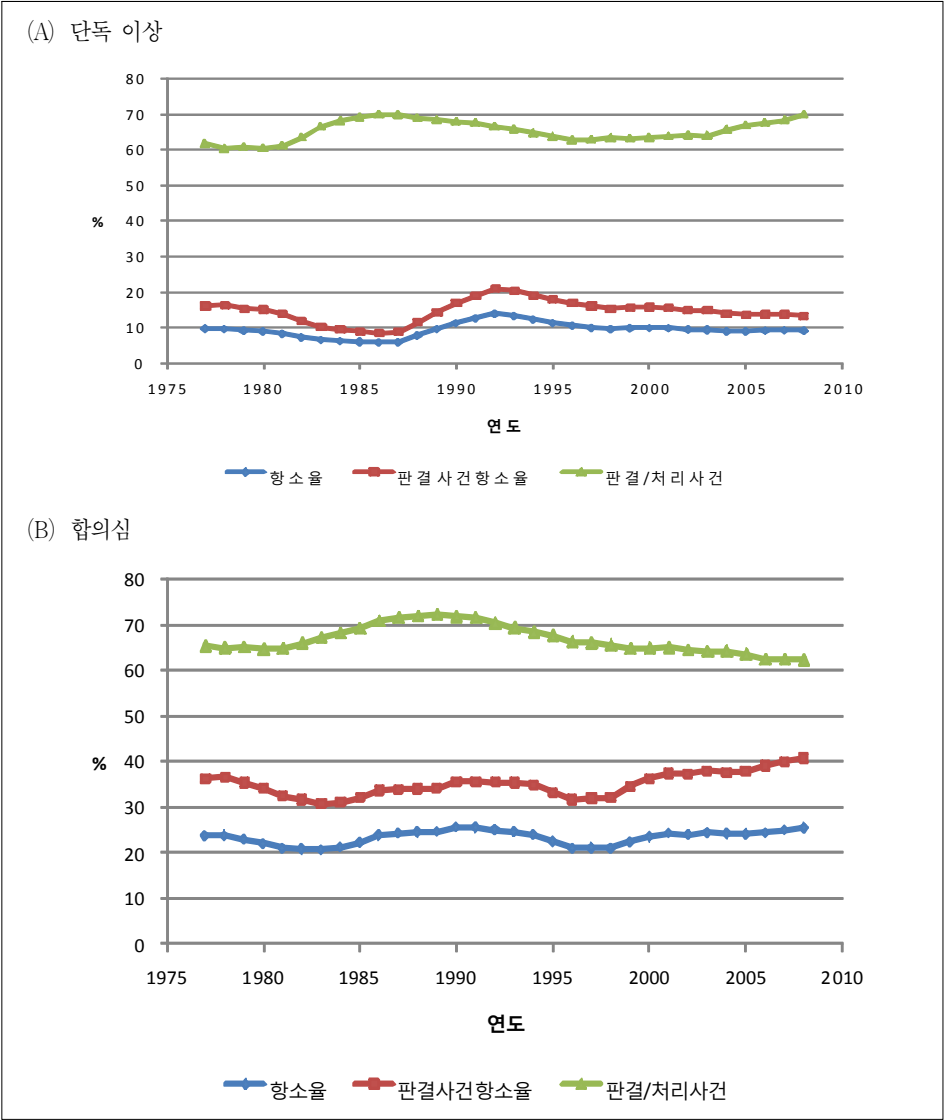
연도	합의심	단독심
1980-1981	2, 000 (1980. 2. 1.)	500
1981-1983		1, 000
1983-1987	5, 000 (1983. 9. 1.)	2, 000
1987-1991	10, 000 (1987. 9. 1.)	5, 000
1991-1993	30. 000 (1991. 9. 1.)	
1993-1997		10, 000
1998-2001	50, 000 (1998. 3. 1.)	20, 000
2001-현재	100, 000 (2001. 3. 1.)	

자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그림 2〉은 197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의 항소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표 1〉의 양상을 확인해 준다.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단독 이상 사건의 경우는 10% 안팎에서, 그리고 합의심의 경우에 20-25% 정도에서 매우 안정된 양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소송가액 상한 조정이 있었던 1998

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에는 단독 이상 사건이나 합의심 사건 모두 큰 변화가 없이 항소율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을 단독 이상 사건은 대략 9-10%, 합의심 사건은 20-25% 정도로 상정하고 이하의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민사본안 1심사건의 항소율, 1977-2008 (5년이동평균, %)



자료: 사법연감.

2. 외국과의 비교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항소율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외국과의 비교는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항소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항소율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준거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다가 주마다 상이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항소율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항소율 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인구 규모와 통계의 사용가능성을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두 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09)에 따르면, 2004-2008년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된 1심 민사소송 가운데 소송가액이 \$25,000 이상인 사건은 연평균 170,000건 수준이었다. 항소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 중 75% 정도가 이들 \$25,000 이상 사건에서 제기되었다고 상정할 때, 항소율은 연평균 2.66%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3〉(A)).¹¹⁾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의 항소율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의 사건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항소율은 우리나라의 30% 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사법 관련 통계에 \$50,000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숫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만큼 비교가능한 수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¹²⁾ 전체 항소사건 가운데 50% 가량이 \$50,000 이상 사건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정 하에 항소율을 계산해 보면, 2004-2008년 기간 동안 \$50,000 이상 사건의 평균 항소율은 약 6.22%이다.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 그리고 합의심 사건의 항소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리노이 주의 항소율 역시 캘리포니아에서와 유

11) 2심법원인 Court of Appeal의 접수사건을 1심법원인 Superior Court의 민사사건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의 항소사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12)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Illinois Courts(2005, 2006, 2007, 2008, 2009).

사하게 우리나라의 30-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3〉(B)).

〈표 3〉 미국 주법원 민사1심사건의 항소율: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A) 캘리포니아 주

	민사사건		민사항소 C	항소율	
	\$25,000 이상 A	\$25,000 미만 B		전체 D=C/(A+B)	\$25,000 이상 E=0.75×C/A
2003-4	176,375	511,621	6,484	0.94	2.76
2004-5	166,337	478,954	6,142	0.95	2.77
2005-6	170,805	503,353	6,018	0.89	2.64
2006-7	166,939	560,325	6,116	0.84	2.75
2007-8	184,891	680,195	5,913	0.68	2.40
평균	173,069	546,890	6,135	0.85	2.66

(B) 일리노이 주

	민사사건		민사항소 C	항소율	
	\$50000 초과 A	\$50000 이하 B		전체 D=C/(A+B)	\$50,000 이상 E=0.5×C/A
2004	33,747	239,184	4,197	1.54	6.22
2005	33,110	238,336	4,314	1.59	6.51
2006	31,736	246,201	4,044	1.46	6.37
2007	32,326	275,970	3,848	1.25	5.95
2008	33,398	245,380	3,904	1.40	5.84
평균	32,863	249,014	4,061	1.44	6.18

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도는 재정회계연도(Fiscal Year)로, 2007-8년의 경우, 2007.10.1-2008.9.30.을 의미한다.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이 \$25,000이상인 경우는 Unlimited Civil, 그 이하인 경우는 Limited Civil을 제시한 것이다. 항소는 “notice filed”를 집계한 값인데, 이는 1심법원에서 항소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집계한 것이다. \$25,000 이상 사건 가운데 얼마만큼이 항소가 제기되었는지는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항소사건 중 75%가 \$25,000 이상 사건에서 온 것으로 상정하고 항소율을 계산한 것이 E이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민사사건으로 통계집에 “Law Cases”에 해당하는 사건수를 제시하였다. 항소율 중 E의 계산 방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하다.

자료: Judicial Council California(2009), p.26, p.49.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Illinois Courts(2004, 5, 6, 7, 8).

정리해 보자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 항소율과 우리나라의 항소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법령의 차이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러

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단독 이상 민사소송 항소율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이들 두 주의 항소율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높다는 추론은 기각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비교는 우리나라 민사1심 사건의 항소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사사법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1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만엔 이상인 사건을 통상소송사건, 그 이하인 경우를 소액소송사건으로 구분한다. 통상소송 중 소송가액이 140만엔 이하인 사건들과 소액소송사건은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에서 다루며, 나머지 통상소송을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에서 관할한다(〈표 4〉).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의 기준이 소송가액 2,000만원이므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 이상 사건의 항소율과 일본 지방재판소 통상소송의 항소율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 민사소송 1심 및 항소 관련 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

한국		일본	
법원	통계상의 사건 구분	법원	통계상의 사건 구분
지방법원	소액심판사건	간이재판소	소액소송
	단독사건	지방재판소	통상소송(140만엔 이하 ¹⁾)
	합의사건		통상소송
고등법원	항소	고등재판소	항소

주1) 裁判所法 제33조 제1항.

주: 양국 모두 1심 법원에서 항소 사건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나 위 표에서는 편의상 삭제하였다.

자료: 대법원, 最高裁判所.

〈표 5〉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일본 지방재판소 1심사건의 항소사건 수 및 항소율이 얼마인지를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항소사건수가 일본은 15,587건으로, 우리나라 항소사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둘째, 하지만 일본의 항소율은 9.8%로,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 항소율 9.4%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법원보다 항소사건 처리 부담이 높지만, 이것은 항소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1심 사건 자체의 양이 많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판결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와 제도

가 유사한 일본과 우리의 항소율이 유사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크게 낮은 혹은 심각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아님을 의미한다.

〈표 5〉 일본 지방재판소 민사1심사건 6항소율, 2004-2008

연도	처리사건 (A)	판결사건 (B)	항소사건 (C)	항소율 (C/A)	판결사건 항소율 (C/B)	판결사건 비율 (B/A)
2004	148,706	71,428	16,336	11.0	22.9	48.0
2005	135,357	63,362	15,990	11.8	25.2	46.8
2006	143,321	60,765	15,290	10.7	25.2	42.4
2007	172,975	61,368	15,141	8.8	24.7	35.5
2008	192,247	62,072	15,176	7.9	24.4	32.3
5년평균	158,521	63,799	15,587	9.8	24.4	40.2

주: 처리사건수는 지방재판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사건수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소액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는 간이재판소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표 6〉의 단독 이상에 해당하는 값으로 볼 수 있다. 항소사건수는 고등재판소의 처리사건수로, 일본 사법통계연보의 표 37 (p. 43)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처리사건수와 판결사건수는 1심통상소송기제사건수로, 해당연도 일본 사법통계연보의 표 19 (p. 36)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자료: 最高裁判所, 『司法統計年報』, 2005-2009.

그 동안 우리 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전제 하에 항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곽태철 외(2006, p. 74)는 “우리나라는 항소율 및 상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¹³⁾ 사법부의 경우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7년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 훈사에서 “우리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학계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⁴⁾

13) 이 외에도 김용진(1998), p. 616, 김용진(2009), p. 375, 유해용(2008), p. 83 및 주 19, 정선주(2009), p. 351 등이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연구도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높다는 연구들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민사 합의심 항소율과 다른나라의 전체항소율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항소율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본 논문에서 실시한 것처럼 동일한 사건들에 대한 항소율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법률신문, 2007. 12. 10.

미국 두 개 주의 항소율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접근이 타당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비교는 기존 접근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사법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법원의 항소율은 현재의 민사사법제도, 그리고 주어진 판사들의 업무부담 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항소율 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하에서는 자칫 항소율 자체를 낮추기 위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에는 배치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증요법은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상적인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항소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V. 항소율 결정 요인: 제도적 측면

항소율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관련 제도, 그리고 판사당 업무부담에 의해 결정된다. 본 장에서는 이 가운데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법원의 기존 정책들을 평가해본 뒤, 다음 장에서 판사업무부담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항소비용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앞서 제Ⅲ장에서는 분쟁당사자의 항소 여부와 소송비용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즉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높아지면 항소율이 낮아짐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항소율을 낮추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정책수단을 항소율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송보다 저렴한 분쟁해결 대안이 적절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높이는 것은 분쟁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낮은 항

소율이 아니라 적절한 분쟁해결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정부는 가급적 소송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은 소송보다 저렴한 분쟁해결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소송관련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부이다. 분쟁 해결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제외할 경우, 소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 즉 식 (9)의 C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행정비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수행에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¹⁵⁾ 항소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비용부담은 항소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포기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비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변호사 비용 측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소송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건국 이래로 오늘날까지 변호사자격자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도 선발 인원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¹⁶⁾ 변호사 자격자의 불충분한 공급은 일차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통로를 차단하였다. 변호사들에게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적 환경은 변호사들 스스로가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만듦으로써, 법원 외의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았다.¹⁷⁾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국민들이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

15) Cooter and Ulen (2008, pp. 425-427) 은 행정비용을 일종의 거름장치(filter)로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소송관련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전병서(2010) 등 참조.

16) 김두열(2007), 김두열·이시욱(2009) 참조.

17)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 역시 ADR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변호사 인력공급과 관련된 통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철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법원 내 조정 활성화

정부는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통상적인 ADR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대신, 법원 스스로가 ADR적 성격을 띤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정책, 즉 법원 내 조정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법원 내 조정의 활성화는 법원으로 온 사건들이 판결까지 가기 이전에 종결되도록 하기 때문에 항소율을 낮추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결 전에 조정 등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비중이 30% 수준인데, 이것은 연방법원 1심 사건 가운데 4%만이 판결로 귀결되는 미국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이며, 이러한 차이는 항소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된다.¹⁸⁾

문제는 법원이 판결전에 사건이 처리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요소들, 즉 항소를 통한 결과의 변화 가능성이나 법원내 조정을 도모하는 전문인력의 공급 등이 법원내 조정의 성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판결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렵거나 변호사의 충분한 공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원 내 조정으로 처리될 사건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사건의 조정 성사 여부는 분쟁당사자보다는 판사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원활한 분쟁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내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촉발시키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본 논문의 맥락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조정을 통한 사건처리를 늘리

18) 예를 들어 법률신문 2010. 10. 21.

19) 2010년 10월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법원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처리된 사건 16,637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6,613건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신문 2010. 10. 21.).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법원의 무리한 조정강요사례를 수집, 공개함으로써, 강제조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법률신문 2010. 10. 21.),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종국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 화해를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됨을 역설하였다. 법률신문 2010. 12. 6.

는 법원의 정책이 내용상 어떠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항소율을 낮추는데는 기여했는가 여부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원 내 조정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임을 전제할 때, 법원 내 조정의 활성화가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판결사건 비율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항소율을 낮추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평가해 보려면 처리사건 중 판결까지 이른 사건의 비율이 얼마이며, 판결까지 이른 사건에 대한 항소율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처리사건 T_t 가운데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수를 V_t 라고 한다면, 항소율과 판결사건 비율 ($k_t \equiv \frac{V_t}{T_t}$) 간에는

$$ar_t \equiv \frac{A_t}{T_t} = \frac{A_t}{V_t} \frac{V_t}{T_t} = arv_t \cdot k_t \quad (10)$$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 $arv_t \equiv \frac{A_t}{V_t}$ 는 판결사건 가운데 항소가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로, 판결사건항소율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식 (10)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판결사건비율과 항소율 간에 일의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k_t 의 하락이 항소율 ar_t 의 유의미한 하락으로 연결되려면 판결사건항소율 arv_t 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는 안된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판결 전에 처리되는 사건의 증가가 판결까지 갔더라면 항소로 이어질 사건들을 충분히 흡수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판결사건비율 하락은 항소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제IV장의 <그림 2>에는 항소율 뿐 아니라 판결사건비율 및 판결사건항소율의 장기 추이도 함께 제시하였다. 단독 이상 사건의 경우는 판결사건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판결전 처리의 증가라는 목표 자체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합의 심만을 놓고 보면 처리사건 가운데 판결전 처리된 사건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판결사건비율은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5%p. 가량은 하락했다. 하지만 항소율은 2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판결사건항소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판결전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로 처리되었더라도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판결전 처리 증가는 법원

업무부담 감소나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항소율 하락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판결전 처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법원 업무 부담 감소나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항소율 하락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3. 항소요건 강화

법학에서는 항소심의 운영 원리를 크게 복심주의(覆審主義), 사후심주의(事後審主義), 속심주의(續審主義)로 구분한다(〈표 6〉). 복심주의란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후심주의는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이 타당한 지 재심사하는 것이다. 속심주의는 복심주의와 사후심주의의 중간형태로,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1심판결의 타당성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표 6〉 항소심의 구조 혹은 운영 방식

종류	내용
복심주의 (覆審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것 - 변론의 갱신권에 제한이 없음
사후심주의 (事後審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타당성을 재심사
속심주의 (續審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심주의와 사후심주의의 중간형태 -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1심판결의 타당성을 재심사

자료: 이시윤(2006), 유해용(2008) 등.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다룬 교과서들이나 논문들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는 속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⁰⁾ 그런데 박태철 외(2006), 김용진(1998, 2009), 방순원(1960), 정선주(2009), 유해용(2008) 등

20) 이시윤(2006), p. 749.

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소심이 “제2의 제1심”이라고 할 만큼 1심과 큰 구별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항소율을 높이는 원천이라고 진단한다.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항소심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다.²¹⁾

항소심 운영을 개선하자는 방안은 크게 보면 소송가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항소가 가능도록 기준을 높이거나 (항소허가제) 혹은 1심의 심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소송가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에만 항소를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별도의 심사부를 설치해서 항소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허가제가 주로 논의된다.²²⁾

소송가액이나 사건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항소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은 항소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송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임을 감안할 때 항소 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해결 노력의 종결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과연 이러한 조치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정부가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현재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논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남소의 가능성에만 의존해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²⁴⁾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입 자원의 증대 대신 분쟁해결의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허가제는 1심 판결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항소제기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것으로, 소송가액 등에 기초한 항소제한방안보다는 합리적이다. 단, 항소허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건을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법원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항소허가제가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는가

21) 항소제기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항소허가제를 강조하는 입장과 제1심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두 입장 모두 기본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들에 대해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2) 상소허가제는 항소심보다는 상고심과 관련해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상고심사부 설치와 관련된 김현석(2010)의 논의를 참조.

23) 혹은 제1심 판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의 시정을 허락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24) 예를 들어 박태철 외(2006), pp. 82-83.

여부는 1심 자체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1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항소를 막는 장치로 항소허가제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분쟁해결의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허가제 도입은 1심 재판의 충실화가 선행될 때 타당한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1심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파악된 뒤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4. 1심 강화

유해용(2008), 정선주(2010) 등 법학계의 최근의 연구는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항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보다는 1심 심리를 보다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항소심을 사실상 사후심화해야 한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1심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그 원인이 법원 혹은 판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소송당사자의 책임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소송당사자들이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변론을 수행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이 빈번하다면, 이것은 온전히 소송당사자의 책임이다. 물론 소송당사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적절한 변론을 수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의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1심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라면, 이러한 태만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본 문제인 셈인데, 이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이 변호사 공급 규제나 변호사 징계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⁵⁾ 1심의 충실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변호사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 셈이다.

25)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두열(2007), 김두열·이시욱(2009) 참조.

소송당사자나 변호사가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결국 제Ⅲ장에서 도출된 것처럼 과연 판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업무부담이 적정한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인력 공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원의 효과적 활용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5. 소결

항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이 가운데 항소비용을 높이거나 소송가액 등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은 분쟁해결의 포기를 종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항소허가제의 경우에도 1심의 충실화를 전제로 법원 운영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항소를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1심을 강화하려면 1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공급 규제 철폐와 징계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심 운영의 개선은 판사당 업무부담 감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Ⅵ. 항소율 결정요인: 판사업무부담

판사당 사건부담은 항소율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해당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확성 여부로, 이는 식 (5)의 δ_i 를 낮춤으로써 항소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둘째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통한 영향이다. 1심 판결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1심의 결과가 수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양상의 누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항소를 통해 1심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낮추어서 궁극적으로 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판사 사건부담은 사건수의 변화와 인력 충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사본안1심 사건은 198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소송가액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민사본안사건은 사건수라는 측면에서나 사건의 복잡성이라는 질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면에서 크게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²⁶⁾ 법원은 이러한 업무증가에 따라 판사정원을 1980년 약 700명 수준에서 2008년 약 2,700명 수준으로 4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판사인력 증가는 사건 증가에 부응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 볼 때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흥미로운 점은 판사들의 장기적인 업무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이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판사들이 늘어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건당 판결에 들어는 평균적인 노력 수준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사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건당 투입노력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개별 사건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모두 처리기간이 지난 3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충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은 사건의 증가라는 외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으로 판사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게 되자, 공정성과 신속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정성 유지를 선택하였고, 불가피하게 신속성의 악화를 감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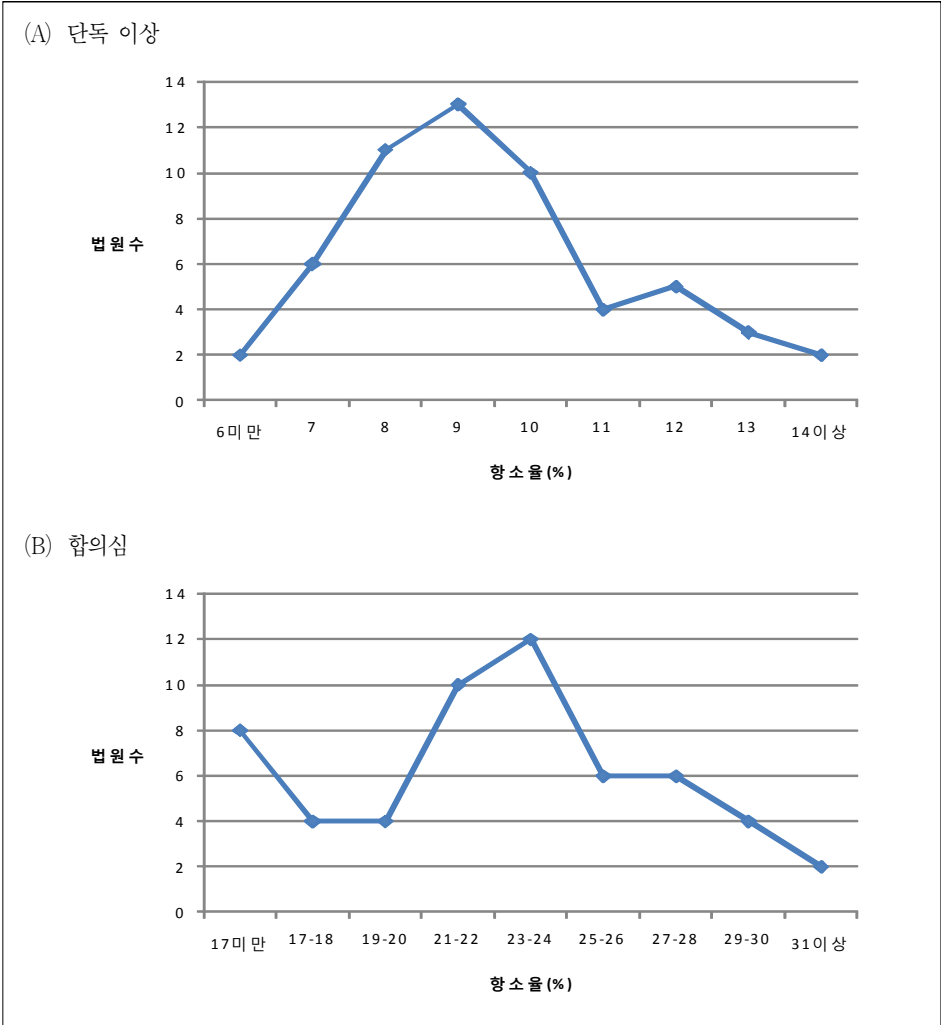
문제는 소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신속성을 포기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원의 대응이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속성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의 하락을 방지하려면 판사업무부담의 경감이 필수적이다. 그럴 경우 과연 판사업무부담 경감이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실제로 항소율을 낮출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6) 김두얼(2007). 한편 식 (9)에서는 사건수와 소송가액을 분리하였으나, 이 두 요소는 판사의 부담을 반영하는 양적, 질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7) 김두얼(2008), p. 26.

28) 신속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김두얼(2008, 2009)를 참조.

〈그림 3〉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항소율 분포: 2008년



자료: 『사법연감』.

이를 위해 지방법원별 항소율과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의 평균처리사건 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보기로 한다.²⁹⁾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법원에 따라 지원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법원 및 지원은 총 56

29) 물론 분석 단위를 지방법원이 아니라 개별사건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확보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자료 확보와 처리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해 보기로 한다.

개이다(〈부표 1〉). 항소율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법원별 차이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측정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우선 〈그림 3〉은 2008년도 민사소송 1심 사건들에 대한 56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항소율 분포를 보여준다. 단독 이상의 경우, 평균항소율은 9.1%이지만 최하 4.3%과 최고 16.8% 간에는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항소율은 23.1%이지만, 최소 12.5%와 최대 37.5% 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법원간 항소율 격차는 다른 연도에도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7〉).

〈표 7〉 지방법원 및 지원의 민사소송 항소율, 2001-2008 (%)

연도	법원수	단독 이상				합의심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2001	53	9.8	2.7	2.5	15.5	20.6	9.2	0.0	39.2
2002	53	9.3	2.5	5.0	15.3	22.6	8.1	4.2	53.1
2003	55	8.6	2.6	2.5	14.2	22.3	8.5	5.3	40.2
2004	55	8.1	1.9	3.9	11.7	19.2	5.5	5.7	29.5
2005	55	9.5	2.0	5.6	14.0	20.1	5.8	11.1	33.9
2006	55	8.6	2.1	5.2	16.9	22.0	6.8	4.4	36.0
2007	56	9.4	2.3	1.4	15.7	22.8	5.1	5.9	35.3
2008	56	9.1	2.3	4.3	16.8	23.1	4.8	12.5	37.5
전체	438	9.0	2.3	1.4	16.9	21.6	7.0	0.0	53.1

자료: 『사법연감』.

판사당 사건부담의 법원별 차이는 법원간 항소율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법원별로 판사업무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법원별 평판사당 평균담당 사건수 (z_{it})로 측정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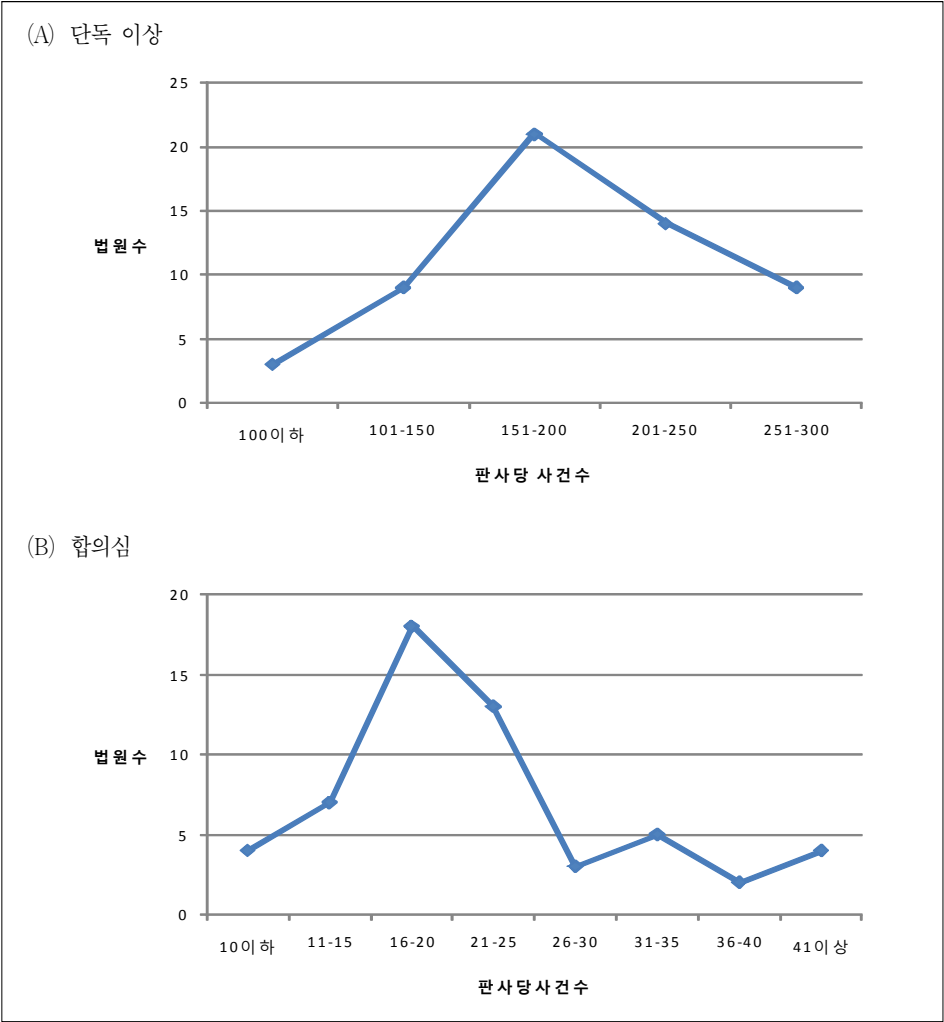
$$z_{it} \equiv \frac{X_{it}}{N_{it}} \quad (10)$$

X_{it} : t 년도 법원 i 의 총처리사건수

N_{it} : t 년도 법원 i 의 평판사수

식 (10)에서 분자, 즉 어떤 법원에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는지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소송절차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관할에 의해 결정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법원 별 판사수는 대법원이 판사당 사건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z_{it} 계산에서는 법원별 전체 판사수가 아닌 평판사의 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지방법원들의 경우에는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이 여러 지원의 합의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4〉 법원별 판사당사건: 합의심, 2008년



자료: 본문 참조.

〈그림 4〉는 2008년도에 z_{it} 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단독 이상의 경우, 평균 사건부담은 약 192건이지만, 100건 이하인 법원부터 300건에 육박하는 법원까지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큰 편차는 합의심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표 8〉는 연도별로 판사당사건수 관련 기초통계를 제시한 결과인데, 이러한 편차가 2000년대 내내 지속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표 8〉 지방법원 및 지원의 평판사당 사건수, 2001-2008

(건/평판사)

연도	법원수	단독심 이상				합의심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2001	53	232.7	43.8	138.0	338.3	32.0	13.0	3.0	60.4
2002	53	218.0	45.6	127.1	353.7	22.6	8.5	7.5	42.7
2003	55	225.8	47.1	128.5	346.0	23.6	9.6	9.0	52.2
2004	55	217.4	50.1	117.1	341.1	24.6	10.8	7.0	55.0
2005	55	212.0	48.9	105.8	361.0	27.8	11.5	14.0	71.3
2006	55	230.1	59.6	71.3	339.4	25.2	11.8	4.5	61.4
2007	56	213.9	52.4	78.0	314.4	26.5	11.8	3.3	59.0
2008	56	235.5	58.2	101.3	349.2	27.7	11.5	8.0	71.4
전체	438	223.2	51.4	71.3	361.0	26.2	11.4	3.0	71.4

자료: 본문 참조.

위의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식 (9)의 독립변수 가운데 소송비용은 모든 법원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 되는 변수이므로, 판사당 사건수와 소송가액이 핵심 설명변수가 된다. 이 외에도 사건의 특성이나 법원의 특성 등을 추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건 특성의 경우, 사법연감은 법원별로 어떤 종류의 사건이 몇 건 제기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크게 부동산, 지급, 손해배상, 기타로 나누어 각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다. 법원별 특성의 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하나는 OLS에 지방법원과 지원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56개 법원의 개별적인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표 9〉은 이상에서 논의한 모든 변수들의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표 10〉은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 회귀분석의 변수 개괄 (단독 이상, 관측치=438)

변수	정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항소율	항소사건수/사건수	9.04	8.91	2.34	1.36	16.93
평판사당사건수	민사본안1심사건/판사수	223.15	216.38	51.36	71.25	361.00
평균소송가액	민사본안1심사건소송가액/사건수	135.76	123.32	53.06	55.54	356.81
지방법원 더미	지방법원 = 1; 지원 = 0	0.35	0	0.48	0.00	1.00
사건종류 비율	해당종류사건/사건수 (%)					
부동산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근저당권 설정말소	0.21	0.21	0.06	0.08	0.36
지급	공사대금, 손해행위취소,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양수금, 어음수표금	0.47	0.50	0.09	0.22	0.74
손해배상	손해배상	0.08	0.08	0.02	0.01	0.20
기타	제3자의청구이의,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0.24	0.24	0.06	0.05	0.52
연도더미	2001-2008년					

주: 사건종류더미의 경우, 2009 사법연감 항소심 사건 통계의 구분 (p.681)에 근거하였다.
자료: 사법연감.

회귀분석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모든 모형에 있어서 평판사당 사건수의 계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판사당 사건부담이 감소할 경우, 항소율이 낮아진다는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이다.

하지만 계수의 크기는 판사당 사건수 증가가 가져올 항소율 하락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번 ‘고정효과 모형-단독이상’의 경우, $\ln(\text{판사당 사건부담})$ 의 계수추정치가 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판사 일인당 업무부담이 평균수준인 223건에서 201건으로 10% 감소할 때, 항소율이 0.21%p. 감소하는데 그침을 의미한다. 합의심의 경우에는 평판사 일인당 업무부담이 26.2건에서 23.58건으로 10% 감소할 때 항소율이 0.51%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독 이상보다는 하락의 절대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항소율 하락은 그다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10〉 민사소송 1심사건 항소율의 결정요인: 2001-2008년

$$\text{종속변수}=\text{항소율}=100*\frac{\text{항소사건}}{\text{처리사건}}$$

	OLS			고정효과		
	단독이상 (1)	단독이상 (2)	합의심 (3)	단독이상 (4)	단독이상 (5)	합의심 (6)
ln(평판사당 사건수)	0.8938 (0.2474)***	0.8652 (0.2529)***	3.6286 (0.7191)***	1.9001 (0.3319)***	1.9352 (0.3341)***	4.7572 (1.0589)***
ln(평균소송가액)	0.5506 (0.3078)*	0.5856 (0.334)*	1.2373 (1.4642)	0.2678 (0.4875)	0.21 (0.5161)	0.5908 (1.6228)
지방법원 더미	0.5558 (0.2344)**	0.5611 (0.2366)**	2.5713 (0.6764)***			
사건종류 더미						
부동산		-1.0508 (2.7948)			-0.335 (2.9617)	
미지급		-1.1746 (1.8529)			1.8440 (2.0725)	
손해배상		-1.4817 (5.5579)			-5.2744 (6.0818)	
기타 (배제)						
연도더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상수	3.9819 (1.6226)**	4.8133 (2.3445)**	0.8246 (8.1769)	2.057 (2.4821)	1.9415 (3.1867)	1.3515 (9.4507)
관측치수	438	438	438	438	438	438
R-Squared	0.0887	0.0832	0.1296	0.3444	0.344	0.2433

주: 연도더미는 200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다.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사법연감』.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항소율 자체가 얼마나 낮추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크게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과의 비교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현재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는 상황과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모형은 항소율 하락의 동태

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반드시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즉 앞서 논의한 외부효과를 고려해 볼 때, 항소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소송당사자들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항소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할 때 판사업무부담의 지속적 감소가 얼마만큼 항소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보다 발전된 모형과 좋은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VII. 결 론

교환은 생산, 소비와 함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에 동의하면, 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교환이 성사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계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스스로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법제도를 운영한다. 판결의 공정성은 이런 면에서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이다. 아울러 사법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이를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항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해 보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意的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사들의 업무부담과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항소율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임을 명확히 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 두 요소가 현재 항소율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 혹은 주요 분석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간 사법부와 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관련 항소가 과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다. 매우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미국, 일본의 항소율과의 비교는 이러한 전제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항소율은 미국보다는 두, 세 배 정도는 높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진 일본과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항소 관련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충실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하면서도 그간 간과되어온 측면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항소율을 보다 낮추려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즉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항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항소는 판결이 충분한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절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 정부정책과 법학계의 논의들은 후자를 항소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항소의 상당수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지향한다기 보다 분쟁상대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혹은 법원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의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결론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 상응한다. 본 연구는 매우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송이라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를 할지 여부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본다면, 본 연구는 항소가 공정한 판결 혹은 합리적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행위로 보는 반면, 기존 법학계의 주류 해석은 항소가 그 반대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실제 항소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그리고 어떤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지 여부는 논리의 문제 혹은 선험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적 검증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제도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소송당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소송당사자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해서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가 수행한 실증 분석은 이러한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지난 30년간 동안 사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살펴보면, 소송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사인력을 이에 맞추어 증가시키지 못한 결과, 판사당 사건부담은 꾸준히 증가해서 항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데 비해, 소송비용 관련 정책은 비용부담을 충분히 경감시키지 않음으로써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항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두 변수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쟁해결방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본다면 판사당 사건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판사 인력의 증원은 판사당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적정 수준의 노력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판결에 대한 동의의 제고 혹은 항소를 경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존재는 법원 단위 수준 통계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실증연구 결과는 판사당 업무부담 경감이 항소를 하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부효과를 통한 추가적 효과, 즉 1심 결과의 질 제고가 항소에서의 판결 변화를 감소시킴으로써 항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는 동태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하였을 때 법원의 판사인력 증원은 공정성 증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회귀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새로이 밝혀낸 것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향후 연구로 미루어둘 수 밖에 없었다. 보다 면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판사들의 실제 업무 방식, 또 판사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인사과과제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보다 항소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추정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사법정책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원활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광태철 · 김용석 · 김제완 · 서경환 · 황용환, 『하급심 강화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Translated in English) Kwak, Tae-Chul et al, *Report on the Reform of Lower Court*, Presidential Committee in Judicial Reform, 2006.
2.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창비,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Doo Sik, *The Immortal Holy Family*, (Changbi, 2009).
3. 김두열,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I): 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8-19, 한국개발연구원, 2007.
(Translated in English) Kim, Duol, *Studies on the Legal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I): Problems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Policy Study 2008-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7.
4. ———,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재판의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안과 법무사 소송대리권 부여안의 비판적 검토,”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 2007, pp.197-213.
(Translated in English) Kim, Duol, “How to Reform Small Claims Court: Critique on Two Competing Views,”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 No. 2, 2007, pp.197-213.
5. ———,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II):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정책연구시리즈 2008-19, 한국개발연구원, 2008.
(Translated in English) Kim, Duol, *Studies on the Legal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II): Diagnosing Delay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Policy Study 2008-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6. ———,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응용경제』, 제11권 제2호, 2009, pp.39-64.
(Translated in English) Kim, Duol,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Growth: The Court System in Korea,” *Applies Economics*, Vol. 11, No. 2, 2009, pp.39-64.
7. 김용진, “제1심의 심리집중 및 항소심의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권 제1호, 1998, pp.616-641.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 Jin, “Improvement of the First Trial and Reforming Appellate Procedure,” *Civil Litigation*, Vol. 1, No. 1, 1998, pp.616-641.
8. ———, “상소심 개선방안: 독일민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pp.372-425.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 Jin, “Reforming Trial System: Comparison with Civil Procedure Code of Germany,” *Civil Litigation*, Vol. 13, No. 1, 2009, pp.372-425.
9.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 Chul, *Thinking about Samsung*, (Sahoi Pyungron, 2010).
10. 김현석,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방안,” 대법원 사법제도개선 공청회 발표문, 2010.

- (Translated in English) Kim, Hyun Seok, "How to Implement Screening Department of Appeal Court," Report Presented at the Hearings for the Advance of the Judicial System, held by the Supreme Court, 2010.
11. 방순원, "신민사소송법의 특이성: 신구법을 대조하여 신법의 특이성을 규명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Vol. 2, No. 2, 1960, pp.239-284.
(Translated in English) Bang, Soon Won, "Aspects of New Civil Precedure Code: Comparison between Old and New," *SNU Jurisprudence*, Vol. 2, No. 2, 1960, pp. 239-284.
 12. 법률신문, "재판상소율 세계 유래없이 높다- 이용훈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지적," 2007. 12. 10.
(Translated in English) *The Lawtimes*, "Apprel Rate is the Highest in the World -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aid at the Meeting of Chief Judges," 2007.12.10.
 13. _____, "항소법원 설치... 심급제도 개선해야," 2010. 3. 3.
(Translated in English) *The Lawtimes*, "Appeal Court Needed --- Trial System Should Be Reformed," 2010. 3. 3.
 14. _____, "강제조정할텐데--- 이의신청해서 뜨거운 맛 한번 보시지요: 서울변회에 접수된 조정 강요 사례들," 2010. 10. 21.
(Translated in English) *The Lawtimes*, "Cases of Coerced Mediation Reported to the Seoul Bar Association," 2010. 10. 21.
 15. _____, "조정·화해, 강요해서는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회의서 강조," 2010. 12. 6.
(Translated in English) *The Lawtimes*, "Mediation, Reconciliation Should Not Be Coerced: The Chief Judge of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at the Meeting of Chief Judges," 2010. 12. 6.
 16. _____, "강제조정 이의신청률 매년 증가," 2010. 10. 21.
(Translated in English) *The Lawtimes*, "Appeal to Compulsory Mediation Grows Every Year," 2010. 10. 21.
 17. 법원행정처, 『21세기 사법발전계획』, 2000.
(Translated in English) *Report on the Advance of the Court in the 21st Century*,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2000.
 18. _____, 『사법연감』, 각년도.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Yeabook of the Court*, years.
 19. 연합뉴스, "향소율 높아 '사법부 불신' 우려," 2005. 2. 1.
(Translated in English) Yonhap News, "High Appeal Rate Can Cause "Distrust of the Court"," 2005. 2. 1.
 20. 유해용, "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사법』, 제6호, 2008, pp.77-116.
(Translated in English) You, Hae Yong,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ppellate Procedure in South Korea and Recommendation," *Judiciary*, Vol. 6, 2008, pp.77-116.
 21. 이국운,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pp.119-145.
(Translated in English) Lee, Kuk Woon, "A Reform Plan for the Recruitment and

- Personnel Policy of Korean Judiciary,” *Sogang Law Review*, Vol. 11, No. 1, 2009, pp. 119-145.
23.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6).
- (Translated in English) Lee, Si Yoon, *Civil Procedure Code*, 3rd ed. (Bakyoungsa, 2006).
23. 이용훈, “대법원장 기념식사 (사법 60주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 pp. 287-289.
- (Translated in English) Lee, Yong Hoon, “Speech of the Chief Judge of the Supreme Court (at the Anniversary of the Sixty Years of Jurisdiction),”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Yeabook of the Court*, 2009, pp. 287-289.
24.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휴머니타스, 2008.
- (Translated in English) Lim, Jong In, and Hwa Sik Chang, *Kim & Chang: A Story on a Group of Lawyers Who Succeeded in Utilizing Neo-Liberalism*, (Humanitas, 2008).
25. 전병서, “소송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2010, pp. 306-326.
- (Translated in English) Chon, Byung Seo, “A Suggestion of the Improvement of Civil Litigation Costs,” *Civil Litigation*, Vol. 14, No. 1, 2010, pp. 306-326.
26. 정선주,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pp. 348-371.
- (Translated in English) Jeong, Sun Ju, “Remedies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of Appellate Procedure,” *Civil Litigation*, Vol. 13, No. 1, 2009, pp. 348-371.
27. 最高裁判所, 『司法統計年報』, 2005-2009 (<http://www.courts.go.jp>).
- (Translated in English) *Japan Judicial Statistics Yearbook*, 2005-2009, Courts in Japan.
28. Cooter, Robert, and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5th ed. (Boston, MA: Pearson, 2008).
29.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09 Court Statistics Report: Statewide Caseload Trends, 1998-1999 Through 2007-2008*, 2009.
30. Kessler, Daniel, and Daniel Rubinfeld, “Empirical Study of the Civil Justice System,” in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eds.,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North-Holland, 2007), Vol. 1, Chapter 5, pp. 343-402.
31.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Illinois Courts, *Annual Report of the Illinois Courts: Statistical Summary-2008*.

〈부표 1〉 각급법원 및 법원별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	고 등 법 법원 및 특 허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 정 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 판 연 구 관	지원 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0	117	42	403	94	261	1,901	2,844
대법원			2			94			96
서울고등법원	1		63				173		237
대전고등법원	1		8				16		25
대구고등법원	1		7				14		22
부산고등법원	1		12				28		41
광주고등법원	1		7				16		24
특허법원	1		8				1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81			283	368
서울가정법원		1			8			32	41
서울행정법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4			63	78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77	97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49	62
의정부지방법원		1			13			67	81
고양지원				1	6			28	35
인천지방법원		1	1		20			110	132
부천지원				1	6			24	31
수원지방법원		1	1		28			112	142
성남지원				1	5			32	38
여주지원				1				11	12
평택지원				1	2			13	16
안산지원				1	6			32	39
안양지원				1	3			22	26
춘천지방법원		1			5			23	29
강릉지원				1	3			15	19
원주지원				1				9	10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5	6
대전지방법원		1	1		17			63	82
홍성지원				1				11	12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5	6
서산지원				1				9	10
천안지원				1	3			20	24
가정지원				1				3	4
청주지방법원		1			9			34	44
충주지원				1				8	9
제천지원				1				4	5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1		22			98	122
서부지원				1	3			20	24
안동지원				1				7	8
경주지원				1	1			6	8
포항지원				1	2			12	15
김천지원				1				11	12
상주지원				1				3	4
의성지원				1				2	3
영덕지원				1				2	3
가정지원				1				6	7
부산지방법원		1	1		23			116	141
동부지원			1		4			22	27
가정지원				1				10	11
울산지방법원		1			8			41	50
창원지방법원		1			14			57	72
진주지원				1	2			14	17
통영지원				1	1			10	12
밀양지원				1				3	4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1		16			73	91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2	3
순천지원				1	3			22	26
해남지원				1				5	6
가정지원				1				3	4
전주지방법원		1			10			38	49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2	3
제주지방법원		1			5			20	26

자료: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 중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How Fair is Korea's Court?: Evaluation from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s

Duol Kim*

Abstract

Does the Korean court make a fair judgement in civil litigation? For answering to this question, I defined fairness as consent of litigants to the judgement, and measured the level of consent using appeal rate.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is not particularly higher than that of Japan, which belies the popular belief. However, continuing effort to enhance the level of fairness should be made. For this regulations on supply of lawyers should be abolished, and enough number of judges should be hired. Regression analysis supports this argument.

Key Words: fairness, appeal rate, cases per judge

Received: Jan. 5, 2011. Revised: Jan. 26, 2011. Accepted: March 22, 2011.

*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Adjunct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113 Hoegiro 49, Dongdaemun-gu, Seoul 130-868, Korea, Phone: +82-2-958-4124, e-mail: duolkim@kdi.re.kr